

## 미완의 기본소득 대선, 기본소득당의 분투

### 오준호

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후보.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 좋아하는 문장으로 다짐을 갈음하겠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PER ASPERA AD ASTRA)  
-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출마선언 2021.11.11.

20대 대선은 한국 최초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도 있었다. 전 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후보가 둘이나 출마했다. 한 명은 오래 지지율 1위를 달린 집권 여당 후보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기본소득 공약으로 부족하다며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완주한 기본소득당 후보다.

그러나 미완의 기본소득 대선이었다. 끝내 기본소득은 대선의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 나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선을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역경을 헤쳐 나갔으나 별에 다다르진 못했다.

기본소득당은 조직도 자금도 기성정당에 크게 열세인 가운데 대선을 치러냈다. 왜인가? 국민을 설득하여 실현코자 한 이상理想이 있어서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그 이상이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 원’이라는 구체적 목표와 로드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세개혁과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성정당 후보에게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전환 비전을 내어 논쟁하자고 요

구했다.

집이 부서졌으면 새 재료로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잔해를 모아 똑딱 뭉 만들어 이것도 집이라고 우겨선 안 된다. 코로나 재난 회복은 재난 이전으로 슬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위기 구조를 근본부터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의 가슴 속, 더 나은 사회로의 도덕적 열망을 끌어내는 회복이어야 한다.

저는 꿈꿉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무한경쟁하지 않고도 누구나 존엄한 사회, 기술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 규모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시합니다. ... 지금의 위기를 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사회를 마침내 실현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 본선 후보 등록 다음날 기자회견 2022.2.14.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기성 정치에 맞선 급진적 비판 정치로서 기본소득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본소득 공약을 걸고 완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거 내내 나는 시대적 위기 해결에 무능하고 게으른 기성정당을 맹렬히 공격했다. 기성정당이 코로나 회복의 방안이라 내놓은 해법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심지어 반동적인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안 정치가 들어갈 틈을 만들려면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선명하고 가차 없는 비판을 통해 공론장의 기득권을 밀어내야 한다. 일반인들은 종종 정치인에게 그만 좀 싸우라고 질책하지만, 비판과 싸움이 없으면 기득권 세력은 견제 받지 않고 낡은 대책을 고치지 않는다. 나는 출마를 앞두고 싸움에 나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한 잔 커피를 들며 글 쓰는 조용한 아침 시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제가 지금 뛰어 드는 곳이 어떤 전쟁터인지 잘 압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맹렬히 싸우려 합니다. ...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오기 바라며 지금은 니체가 남긴 말 "진실을 말하고 활과 화살을 능히 다루어라"를 가슴에 새깁니다.

- 출마선언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2021.11.10.

윤석열 시대에 기본소득 정치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기본소득 정치는 급진적 비판과 과감한 대안의 정치여야 한다.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현금복지나 골목경제 활성화 수단에 머물 수 없다. 기본소득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현대 민주주의를 공유부 평등권에 근거한 공유자 민주주의로 혁신하는 무기다. 자연에 대한 착취적 관계를 끊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득보장정책 논쟁은 제대로 벌어지지 못했다. 그 책임은 거대 양당에게 있

다. 민주당은 이 의제를 주변으로 미뤘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의제를 정할 힘이 미약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며 정권교체면 다 된다고 큰소리쳤다. 이재명은 선거 내내 우향우하며 기본소득 공약을 뒤로 감췄고 감세 약속에는 적극적이었다. 심상정은 진보정치의 대변자를 자처하였으나 시대적 위기를 타파할 과감함이 없는 선별적 소득정책만 내세웠다. 토론하자고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미래를 말하지 않고 현재의 익숙한 방식에 타협하며 급기야 과거의 성장우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기성정당 후보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나는 가라앉는 기본소득과 소득보장 의제를 수면에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쳤다. 즐기차게 입장 내고 후보들에게 질문하여 논쟁을 시도했다.

내 문제 제기를 그들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 내가 초청받지 못한 ‘4자 토론’ 중에 나왔다. 안철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공약이 “연 80조에서 많으면 400조까지, 5년이면 400조에서 2천조까지 든다”라며 재원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안철수가 말한 연 400조(5년간 2천조)는 기본소득당의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 원’ 공약에 드는 예산이다. 안철수는 나의 기본소득과 이재명 기본소득을 묶어 질문한 것이다. 이재명은 2천조가 어디서 나왔느냐며 자기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해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장면이, 소수정당 후보의 목소리를 지위 대안의 상상력을 가두는 현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 기성정당을 향한 기본소득당의 선명한 비판

지난해 가을, 윤석열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갖은 말실수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 정책 1번에 기본소득을 넣은 인물이다. 나는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의 주도 하에 중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상당히 전향적인 소득보장정책을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짝퉁이더라도 ‘윤석열 기본소득’을 내리라고 봤다. 그러면 이재명도 뒷방에 넣어둔 기본소득을 전면으로 내걸고, 심상정도 가세해 소득보장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그랬더라면, 나도 논쟁에 끼어들면서 기본소득당의 정책과 사회전환 비전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더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양당 후보는 국민 삶과 직결된 소득보장 논쟁은 회피하고 대장동 의혹, 캠프에 무속인이 있는가 역술인이 있는가 따위 의혹으로만 서로를 두들겼다. 대안 논쟁이 사라지니 군소후보들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대안 논쟁을 끌어내기 위해 쉼 없이 기성 정당 후보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물론 지급 수준이 낮더라도 기본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가진 매력과 이상적 취지는 살리기 힘들다. 이재명의 ‘용돈 기본소득’은

사회전환의 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재명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 월 65만 원 기본소득의 차이는 첫째는 금액의 차이이고 둘째는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전환 전망의 차이다. 기본소득당의 계획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조세개혁·재정개혁과 부동산개혁·에너지전환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한다는데 왜 굳이 출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진작 방안,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하고 목욕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큰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자고 말하겠습니다. ...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기본소득 월 65만원’ 공약 발표 기자회견 2021.11.23.

이재명을 비판한 또 다른 지점은 기본소득 공약을 계속 뒤로 물리고 숨기는 태도였다. 이재명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또는 토지보유세)은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자신의 다른 공약에 대해선 ‘국민 동의’ 같은 조건을 단 적이 없다.

나는 이런 태도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취할 정직한 태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설령 당선 되더라도 기본소득 추진 동력을 상실할 거라고 지적했다. ‘테세우스의 배’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용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우리가 알던 이재명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가 타고 온 배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배가 여기저기 망가지자 사람들은 낡은 부품을 새 부품으로 하나씩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품이 싹 교체된 배는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아닙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 버리고, 토지보유세 버리고, 탄소세 버리고, 범주형 수당과 부동산 감세와 대규모 투자만 집어넣은 이재명은 이재명입니까, 아닙니까?

- 기자회견 발언 2022.1.4.

이재명의 이러한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태도는 중도 유권자의 눈치를 본 것이겠으나 결과적으로 패배의 원인이 됐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이재명은 선거 내내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쟁점을 던지면 이재명은 그에 반응하기만 했고 대장동 등 각종 의혹에 해명하느라 바빴다. 만약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며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까지 공약했다면, 윤석열이 이에 대응하고 나섰을 테니 이재명이 의제를 주도했을 것이다. 의제를 선점하지도 주도하지도 못하는 이재명은 ‘김빠진 사이드’

라는 조소를 들고 선거에도 졌다.

심상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이 ‘시민평생소득’이라는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시민평생소득 정책 중 핵심인 ‘시민최저소득’은 ‘진보판 음의 소득세’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선별주의 정책이며 따라서 재분배 규모가 작다. 그래서 불평등 타파에 역부족이다.

시민최저소득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약 200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정하고 시장소득이 그 이하인 국민에게 소득액과 기준소득의 차액의 절반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지원수준이 높다. 그러나 중위소득 언저리에 있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제도의 수혜자를 가르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는 제도는 확대 가능성이 낮다.

또 시민최저소득은 개인이 아닌 가구에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소득과는 비전 자체가 다르다. 결정적으로, 시민최저소득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계획이 없었다.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합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전 국민 소득보험을 도입합니다. ...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습니다. 심 후보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 심상정 시민평생소득 비판 기자회견 2021.12.22.

끝으로, 나와 기본소득당은 모든 후보에게 코로나 회복이든 복지국가 전환이든 증세 없이 불가능하므로 증세를 포함한 재정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기본소득 65만 원과 복지서비스 확대의 재원 연간 약 38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과 소득세제 정비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제출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가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배당을 기본소득 기금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밝혔다.

최악은 윤석열이었다. 재정계획이 정말 무책임했다. 윤석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원가주택 공급, GTX 신설, 병사급여 200만 원 지급, 복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약속했고, 돈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다.

나는 윤석열의 공약을 다 시행하려면 드는 비용을 추계하여 5년 간 373조가 든다고 지적했다. 감세한다면 임기 중에 세수가 70조나 줄어드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예산 300조원에서

연간 70조원을 어디에서 깎을지 답해야 합니다. ...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세금을 더 깎겠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12조원씩 세수가 감세됩니다. ... 거기에 윤 후보는 국가채무를 통제한다며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 한손으로 373조짜리 공약을 던지고 다른 손으로 세수와 지출을 줄인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 윤석열 재원계획 비판 기자회견 2022.1.28.

윤석열은 정권교체만 되면 다 가능하다고, 별 따는 거 말고는 다 할 것처럼 큰소리쳤다. 그래놓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향해 우선순위가 아니니(예산이 부족하니) 기다리라고 한다.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 없다.

재정계획이 부실하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다. TV토론에서 이재명은 “임기 중 증세는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다. 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대통령이냐 감세 대통령이냐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요구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는 제쳐놓고라도 그것은 적어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기본소득이 아니다.

심상정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증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 문제 제기는 맞다. 그렇지만 심상정의 증세 계획은 진보정당의 계획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그 점을 지적했다. 심상정의 증세 계획으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딱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된다. 기본소득당의 계획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를 확 끌어올려 단숨에 OECD 최상위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심상정의 복지국가 플랜은 20년 전엔 한국의 진보적 미래였지만, 한국이 경제 선진국인 된 지금은 너무 평범하다.

### 씨 뿌리지 않고 다음은 없다

거대양당은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전환의 비전을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시장에 맡겨 규제를 풀면 해결된다는 먼지 냄새 나는 신자유주의 교본을 되풀이해 읽었다. 민주당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또 강조할 뿐 낮은 분배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선별복지와 일자리 공급 위주 해법에서 못 벗어났고 분배계획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며 진보의 비전을 쇠신하지 못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발판을 만들고자 득권 정치세력과 힘을 다해 싸웠다. 먹구름 사이로 잠시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은 장마가 끝나간다는 걸 안다. 기본소득당이 있어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으리라 믿는다.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은 19세기 프랑스 탄광 광부들의 파업과 좌절을 그린다. 광부 파업에 앞장

선 에티엔은 파업이 패배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그는 패배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분노와 희망의 씨가 땅에 뿌려져 싹이 텃다고 확신한다.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진 새 달력에서 제르미날은 ‘싹 트는 달’을 가리킨다. 기본소득 있는 새로운 사회의 씨가 국민들 마음에 뿌려졌고 작은 싹이 자랐다. 싹이 났다 해서 열매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씨 뿌리고 싹 틔우지 않고 그 다음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